

**2017년 6월 17일 시행
서울시 공무원 시험총평**

과목명 : 행정학개론
교수님 : 남진우

○ **단원별 출제 분포도**

구분	문제	문항수
제1편	정부관, 규제개혁방향, 행정학 이론, 관료문화	4
제2편	정책 관련 모형, 불확실성의 극복방안, 정책평가방법	3
제3편	조직유형, 동기부여이론, 의사전달	3
제4편	공무원 구분, 인사청문회, 교육훈련 방법, 공직윤리	4
제5편	예산안 편성과정,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예산 관련 모형	3
제6편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의결사항, 지방교부세	3
제7편		
계		20

○ **총평**

영역별 - 영역별로는 행정학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으나 인사행정론의 출제비중이 약간 높았습니다.

신구(新舊)조화 - 신구문제가 적절히 조화되었습니다.

난이도 - 난이도 측면에서는 과거 교행직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난이도를 보입니다.

○ **수험 대책**

- ① 시험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주요 빈출문제가 반복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중 빈출문제의 경우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② 시험문제는 기존에 반복되는 문제에 새로운 경향의 문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경향문제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왜 출제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 됩니다.
- ③ 시험공부는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요.
- ④ 꾸준함도 재능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수험공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 2017년 교행9급 행정학개론 >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정답] ③ 규제개혁은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정답]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며 자유시장을 신봉한다.
-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다.
-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㉔. 정책 델파이 ㉕. 정보의 충분한 획득

- ① ㉓, ㉔ ② ㉓, ㉔, ㉕
 ③ ㉔, ㉕, ㉖ ④ ㉓, ㉔, ㉕, ㉖

[정답] ③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의 소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한다.

가장 이상적인 불확실성 극복방법은 이론이나 모형의 개발로서 정책대안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 개입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되, 시행착오적인 방법의 근본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식으로 채택한 정책실험과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정책 델파이·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도 있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 ① 강의(lecture)
 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정답] ③ 조직발전(OD : Organization Development)의 기법 중 하나인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에 관한 설명이다.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정답] ① 정책 관련 모형 중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하는 것은 하위정부모형이다.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정답] ④ 업무 환경요인의 개선은 위생요인(불만요인)으로 불만을 줄어들이지 모르지만, 직무수행과 관련된 동기요인(만족요인)이 낮아 근무의욕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로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과 관련이 있다.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정답] ①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정답]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이 있으며, 합리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계획예산과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니기 어렵다.
-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이론이다. 이 모형은 예산이 전년 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 다만 사후적인 분석으로서는 적절하지만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접근이다.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정답]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다고해서 그 평가의 타당성까지 높을 수는 없다.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신뢰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CIPP 평가 모형은 Daniel L. Stufflebeam이 제안한 의사결정지원 평가모형으로 상황(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신설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과 각각의 정산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정답] ① 제시문은 매트릭스조직으로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낮아진다.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정답] ③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 헌법에서 동의를 요하는 경우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으나,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